

특집 I

1998년 민주노조운동을 점검한다

한국의 노조운동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노선과 기조를 갖고 있는가?

조직내부의 민주성과 통일성은 보장되고 있는가? 조직을 향한 혁신작업은 진행되고 있는가?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따라잡을 수 있는 정체역량과 조직단결력을 갖고 있는가? 미래지향적인 기획과 설계를 하고 있는가? 쟁점과 차이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그 결과를 결정하고 있는가? IMF 관리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한국의 노조운동은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출하지도 역동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했다.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1998년 민주노조운동을 점검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1998년 민주노총 전략전술 평가 / 윤효원

노동조합운동의 조직혁신을 위한 제언 / 노향래

특집 II

IMF관리체제 1년 : 한국경제 진단

외환위기를 겪고 IMF관리체제로 이행한지 1년이 지났다. 이후 새정부가 들어섰고, 1인당 GDP는 절반으로 내려앉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부실은행들이 퇴출되는 등 엄청난 격변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지게 된 원인을 짚어보고, 빈사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의 처방전인 DJ노믹스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DJ노믹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강병구

시장의 실패인가 국가의 실패인가 / 차상우

1998년 민주노총 전략·전술 평가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1998년 민주노총은

- 노사정위원회 참여와 불참,
- 정리해고 투쟁, 현대자동차
- 투쟁을 거치면서 갈등과 혼란을
- 거듭해 왔다. 이러한 위기와
-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 1) 정치세력화의 올바른 방향과
- 기조를 정립하고,
- 2) 산별노조 전환·산별교섭 체계
- 획립·실업자 비정규직 조직화에
- 앞장서야 하며,
- 3) 조직 내부의 민주성과 조직
- 혁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 4) 민주노총의 내셔널
- 센터로서의 역할을 바로
- 해야 한다.

1. 들어가는 말

98년 상반기 한국사회는 엄청난 사회적 경변을 경험하였다. 경제위기와 공황 속에서 대규모 부도와 폐업, 정리해고와 인력감축이 진행되었다. 그 동안 안정된 직장을 자랑하던 금융권 노동자 조차 수만 명이 길거리에서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현장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와 임금 동결과 삭감이 자행되었다. 30여년만에 처음으로 7.7%의 높은 실업률과 더불어 수 천명의 노숙자가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하면서 사회 쟁점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정치적으로는 30년만에 야당이 집권하여 이른 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고, 집권세력이었던 한나라당이 야당 탄압을 규탄하는 코메디도 연출하였다. 경제 위기와 공황, 신정권의 등장이라는 외부 조건의 변화와 더불어 민주노총은 2월 6일 1기 노사정 합의와 대의원 대회 부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총파업 철회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 지도력 부재라는 또 하나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다. 4월 말 선거 끝에 노사정위원회 불참, 정리해고·파견체 철폐, 민주노총 혁신이라는 과제를 내걸고 2기 지도부가 출범하였다. 새롭게 다시 출범한



현대자동차의 경우, 연대전선미 경비되어 있는거나 해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기업별 노동조합이 공존해와 상면충돌하여 해지는 것이 불리운 전술이었는지는 의문스럽다.

민주노총은 상반기 총파업투쟁을 주도하게 된다.

2. 1998년 민주노총 상반기 투쟁의 전개과정

민주노총은 5월 20일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 정리해고·파견제 철폐,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여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 쟁취를 위해 상반기 5~6월에 총파업을 기본으로 하는 총력투쟁을 베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아울러 ① 정리해고·파견제 철폐, ② 부당노동행위 근절, ③ 대등한 힘상기구로서 위상, ④ 재벌해체 등 4가지 조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노사정위원회 불참으로 입장장을 정리하고 대정부 직접교섭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5월 1일 메이데이 대회는 격렬한 가두투쟁으로 전개되었고, 5월 27일에는 1차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6.10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6월

5일 정리해고·파견제 남용방지 방안 논의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의 노정 합의를 이루고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의하였다. 그렇지만 6.5 노정 합의에서 합의한 주요 현안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자, 민주노총은 또다시 7월 10일 노사정위원회를 달퇴하고, 7월 14~16일 총파업을 조직하고 다시 7.23 전면총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7월 23일 새벽, 삼미특수강 노동자 복직과 현대자동차 사태 해결 등 몇 가지 현안 문제를 합의하고, 다시 한번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의하게 된다.

1) 정리해고제 철폐와 고용안정투쟁

상반기 고용안정투쟁 요구의 핵심은 정리해고제(-파견제) 철폐였다. 그러나 2기 지도부가 출범할 때 가장 중요한 요

구로 부각시키고 1기 지도부와 차별성을 강조한 이 부분은 결국 6·5 노정합의에서 남용방지 방안 논의라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그나마도 하반기 사업계획에서는 장기 과제로 자리매김되고 노동시간 단축이 주된 요구로 확정되었다. 최근에 와서 이 부분을 강조해왔던 논자들이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쟁점을 옮겨가면서 실제로 정리해고제 철폐 문제는 실질적인 쟁점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평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반기 투쟁에서 과연 정리해고 철폐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2기 지도부의 의지 부족, 또는 민주노총의 관료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인가. 아니면 그 요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었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자본주의는 경제법칙상 생산의 사적 소유와 무정부성으로 인해 항상 상대적 과잉인구와 실업을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황기에는 과잉생산으로 인해 기업의 대규모 부도와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과 정리해고를 동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경제법칙을 정리해고제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철폐할 수 없는 것이며(과거 정리해고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판례는 정리해고제를 인정하였다), 임금제도 그 자체를 철폐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따라

현장에서 “한 명의 정리해고도 허용할 수 없다”는 표현은 자본에 의한 정리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분노와 결의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리해고제 원전 철폐”라는 전술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서 정리해고제 철폐라는 구호는 대중의 분노와 결의를 반영하는 것이기는 해도 전술적 구호로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장에서 “한 명의 정리해고도 허용할 수 없다”는 표현은 자본에 의한 정리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분노와 결의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리해고제 원전 철폐”라는 전술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리해고제 철폐가 지난 상반기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지루하고 어려운 투쟁의 과정에서 생취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과제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2기 지도부가 그 투쟁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이유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정리해고제 철폐는 “정리해고 없는 새로운 세상의 전설”이라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과제의 구상 속에서 자기 지향과 침로를 가져야 했던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고용불안의 해결책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과제를 보다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천을 집중했어야 했다. 더불어 공황기에 노동시간의 단축 문제와 연계되는 임금삭감 문제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

해 사회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실천 대안이었을 것이다.

2) 현대자동차 투쟁 문제

정리해고 및 노동시간 단축 투쟁과 연계되면서 평가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이 현대자동차 투쟁이다. 현대자동차 투쟁 평가는 주로 정리해고를 전면 반대하고 파업투쟁을 끝까지 전개해야 옳았나, 아니면 정리해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옳았는가 하는 점과 단위노조 지도부의 행태에 평가의 초점이 두어져 있다. 그러나 "총노동과 총자본의 대리전"이라고까지 규정된 이 투쟁이 실제로는 철저히 단위 기업노조에 맡겨진 투쟁으로 시종일관했다는 점과 이 투쟁에서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투쟁 전선을 구축했는가의 문제도 평가해 보아야 한다.

실제 총자본이 집중적으로 거세게 반격한 이 투쟁에서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슈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걸맞는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으며, 계별의 중복과 임투자와 경영실패를 사회 이슈로 만드는데도 실패하였다. 또한 "총노동의 위상"에 걸맞는 연대투쟁을 전개하지도 못했으며, 막바지에 집회 한번 조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말았다.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은 공식적으로는 정리해고제 칠페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개별 단위 노조

에 투쟁의 전개과정과 마무리를 맡기고 말았던 것이다.

회망퇴직자까지 포함하여 1만 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잘잘못을 가려내어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수용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현실적인 대응이 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노동운동 일각에서 현대자동차 노조 지도부에 비난을 가한 것은 지나쳤다. 실제로 "자연감원"의 형식으로 9,000명 이상이 해고된 부분을 문제삼거나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 살펴보기보다는 노조가 치열한 파업투쟁까지 전개하여 최소로 줄인 결과인 수백 명의 정리해고자 문제만 집중 거론하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편협함을 보여줄 뿐이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연대전선이 정비되어 있기는커녕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기업별 노동조합이 공권력과 정면충돌하여 깨지는 것이 옳바른 전술이었는지는 의문스럽다.

이러한 상반기 투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하반기 투쟁방향이 설정되다 보니, 상반기 정리해고 칠페투쟁, 하반기 재벌해체 투쟁으로 "지그재그식"으로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이 설정되고 있다. 실제 재벌해체 투쟁보다는 고용안정이 조합원 대중의 주된 요구이다. 따라서 투쟁의 동력과 정치투쟁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고용안정투쟁, 그 중에서도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집중 부각시켜 나

가면서 재벌해체투쟁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하반기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3) 노사정위원회 참여 문제

2기 차도부는 출범과 동시에 노사정위원회를 둘러리 기구로 규정하고 정리해고제·파견제 철폐 등 노사정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정부와 직접 교섭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두 차례에 걸친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노정 합의사항 내용을 갖고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를 둘러싸고 노사정위원회는 “신자유주의적 노동통제의 수단이며 코포라티즘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탈퇴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정책참가의 단위이므로 참가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코포라티즘적 협약기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정책참가의 단위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실제 김대중 정부가 2차 대전 이후 코포라티즘을 추구한 서유럽 각국 정도의 친 노동자정권도 아니며, 노동 측에서 이를 강제할 만한 친노동자정당이나 강력하고 통제력 있는 노동조합

총파업과 같은 종대한 시안에 대해서는 척실한 준비, 폭넓은 내부 토의와 결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중앙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다른 위원회처럼 정책 참가단위로 부르기에는 사회 전체의 의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단순한 정책 참가 단위와는 성격과 위상이 다르다.

정권은 현재 노정합의 사항도 대부분 무시하고 있으

며, 그렇다고 사회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가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 노사정위원회 해체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1기 합의사항을 소극적으로 준수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새로운 의제에 대해서는 매우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노사정 참여는 전술 수단으로서 대중투쟁을 엄호하고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올바른 전술이라고 보인다. 즉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를 중심에 세워 이것을 사회 생활으로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합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불이행을 추궁하며, 대중 투쟁의 근거지를 만드는 역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조건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목표를 갖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보여진다. 특히 하반기에는 노사정위원회의 핵심 요구를 사회 생활으로 부각시키면서 11월 대회를 기점으로 대중투쟁을 활

성화시키고 요구를 생취해나가는 방향으로 민주노총이 활동해야 할 것이다.

4) 총파업 철회

6.5 노정합의와 6.10 총파업투쟁의 철회, 7.23 노정합의와 총파업 투쟁의 철회, 2기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2차례에 걸친 총파업 투쟁과 유보 전술은 과연 투쟁동력이 있었는데 지도부가 이를 막기 한 것인지, 아니면 총파업이라는 투쟁방침이 옳았던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다. 지도부가 두 차례나 "양치기 소년"이 되었다는 혹평도 있고, 지도부의 의지는 있었는데 산별연맹이 투쟁동력을 평계로 총파업 전술을 무산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돌이켜 본다면, 6월 총파업 투쟁은 2기

지도부가 발족한 후 총력투쟁 조직의 시기가 속박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주도하여 총파업을 전개했다기보다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투쟁 전선이 형성된 측면이 강했고, 이 점 때문에 이후 투쟁의 요구와 수준을 둘러싸고 중앙과 산별연맹이 갈등을 빚게 되었으며, 충분한 조직적 준비와 요구의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쟁이 철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7.23 총파업 전술은 둘러 이 뒤따르지 않는 가운데 2단계 파업으로 무리하게 설정되었으므로 유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과정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조직 내부의 충분한 준비와 결의 없이 총파업 전술을 결정하는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2기 지도부 스스로도 6.5 노정합의 직전 김대중 대



통령의 방미외교 협조 운운 하며 교섭에 연연하는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겉으로의 강경한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서도 총파업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착실한 준비, 폭넓은 내부 토의와 결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노동조합 내부의 위기와 극복 방향

경제위기와 공황, 그리고 이로 인한 '저성장-고실업 상황'은 '고성장-저실업 상황'에서의 기업별 노동조건의 개선과 이를 통한 민주노조 운동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토대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더구나 내부의 다양한 이견과 차이가 민주적 토의를 통해서 조직의 통일된 방침으로 모아내지 못하는 현실은 노동조합 내부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조합원수 감소와 재정의 취약, 노총·산별연맹·지역본부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조직 내부의 토론 과정에서 비판이 비난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노동조합 내부의 불신과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노동조합은 어디에서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구태의연한 주먹구구식의 실천과 내용이 아닌 근본적인 혁신과 미래지향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혼돈과 위기의 시기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기회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어왔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성장과 폐배, 전진과 후퇴, 절진과 비약의 나선형적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다. 어느 시대나 데더욱 과도기라는 혼란의 시기에는 분열과 차이와 이견이 치열하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무기'를 점검하고, 그 동안의 활동과 투쟁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잘못된 것을 가려내고, 준비된 역량을 조직으로 모으고, 실천 가능한 (무엇보다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민주노조 운동 10년을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출범한 지 3년이 되었다. 비록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표와 방향, 노선과 기조를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다면 이를 마련하기 위해 대중적인 토의를 진행한 적은 있던가?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정치세력화를 해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는 많았지만 이를 위해 실제 무엇을 하였던가? 조직 내부의 민주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고, 조직 혁신을 이루기 위

해 무엇을 해왔던가?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세계 최고의 전투성을 자랑하는 민주노조운동”이라는 자기도취에 취해 있지는 않았던가? 과거 10년의 전통과 성과에 얹매여 미래지향적인 기획과 설계를 계울리 하지는 않았던가? 쟁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봉합하고 결충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던가? 따위의 많은 문제들을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다.

실제 현장의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구태의연한 주먹구구식의 실천과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혁신과 미래지향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현장 조직의 움직임과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은 그것 자체로는 민주노조 운동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에서부터 중앙 사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모색하고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기존의 틀로는 담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한 대중 운동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개의 현장조직이 말로는 노동운동 전반의 원칙과 기준을 얘기하면서도 실천은 기업별 노조의 한계에 얹매여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말로는 “금전적 정치주의”를 설파하면서도 실천은 “경제주의”에 머무르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현장조직들이 진정한 현장성과 대중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의 활동방식을

고집한다면, 이들은 노동조합운동의 질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으로 현재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① 정치세력화의 올바른 방향과 기조를 정립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오늘날의 구조적 위기와 경제위기 상황이 노동조합 자체의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97년말~98년초의 총파업은 우리에게 노동자 정치세력의 부재가 얼마나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경험케 하였다. 대규모의 정리해고와 임금삭감·동결, 그리고 대량실업은 노동자 대중에게 엄청난 분노와 더불어 한계를 빼저리게 느끼게 만들고 있다. 이들의 동력을 민주노조운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 구조의 근본 개혁으로 이끄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로 집중시키지 않는다면 문제는 항상 제자리를 땜들 뿐이다.

정치세력화를 위해 우선 한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지에 대한 폭넓은 대중 교육과 대중논의가 실행되어야 하며,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노동운동의 강령으로 정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올바로 알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노동조합과 정당이 조직적 차별성과 내용의 동질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

해서도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② 산별 노조 전환 · 산별교섭 체계 확립 · 실업자 비정규직 조직화에 앞장서야 한다.
공황기에 기업별 노조로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 · 비정규직을 조직할 수도 없으며, 기존 노동조합 조직의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없다. 이제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장기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의 실천 과제로 떠올랐다. 사정이 이런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대한 조직 방침,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산별노조의 모습, 산별 교섭으로의 전환 따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별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난무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하루빨리 산별 방침을 제시하고, 이를 대중 토론에 붙이고, 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그 내용과 방침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조직 내부의 민주성과 조직 혁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총-산별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의 의사 소통에 동맥경화 현상이 심각하며, 합의된 결정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 안에서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쟁점과 사안에 대한 조직 내부의 공유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2기

지도부는 조직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상반기 대의원대회에 제안한 바 있으나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각급 조직의 지도부가 참가하여 조직에 대한 진단과 조직 혁신의 대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결과는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현장 조합원 토의에 부쳐야 하며, 토의 결과는 단위노조→산별연맹→민주노총로 모아지고 토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혁신안을 만들어야 한다.

④ 민주노총은 내셔널 센터로서의 역할을 바로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내셔널 센터로서의 위상을 바로 정립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을 둘러싼 전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연맹이나 주요 노조의 현안투쟁에 떠밀려 무리하게 총파업 선언을 남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투쟁같은 총자본과 총노동간의 투쟁에서는 전국적인 투쟁 전선을 형성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를 조직하고, 실업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노동조합운동이 취업노동자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계급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전국중앙조직(내셔널 센터)로서의 위상을 하루바삐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